

공 개



의안번호	제 9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3. 18. (제 5 차)	

(서울)푸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3. 18.

## 1. 의결주문

(서울)푸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푸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대상인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서울)푸른저축은행에게 기관경고를, 직원 17인에게 감봉 등 조치 건의를 하고 직원 5인에게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2020.2.25.) 심의필

<별지>

(서울)푸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 ○ 조치사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기관경고 등 조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기관경고 등 조치

#### ○ 법적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 직원 17명에 대한 조치 : 부장 안◆◆에 대하여 감봉 3월, 과장 류ㅍㅍㅍ에 대하여 감봉 3월, 과장 양ㅍㅍㅍ에 대하여 감봉 3월, 대리 이ㅍㅍㅍ에 대하여 감봉 3월, 사원 이ㅍㅍㅍ에 대하여 감봉 3월, 사원 김ㅍㅍㅍ에 대하여 감봉 3월, 사원 김ㅍㅍㅍ에 대하여 감봉 3월, 사원 김▶▶에 대하여 감봉 3월, 사원 선▷▷에 대하여 감봉 3월, 사원 차▼▼에

대하여 감봉 3월, 이사 이▽▽에 대하여 견책, 차장 김●●에 대하여 견책, 사원 김●●에 대하여 견책, 사원 정●●에 대하여 견책, 사원 채●●에 대하여 견책, 과장 이■■에 대하여 주의, 대리 안㉠㉠에 대하여 주의

□ 직원 5명에 대한 조치\* : 퇴직자위법사실(계장 이◇◇에 대하여 정직 6월 수준, 사원 이◆◆에 대하여 정직 6월 수준, 대리 이●●에 대하여 정직 6월 수준, 차장 김□□에 대하여 감봉 3월 수준, 대리 성○●에 대하여 주의 수준)통지

\* 제재심의위원회(2020.2.25.) 의결 이후 사직(이●● 대리 : 2020.3.2., 이◇◇ 계장 : 2020.3.9., 김□□ 차장·성○● 대리·이◆◆ 사원 : 2020.3.13.)

#### ○ 조치사유

- 계장 이◇◇ 등 22명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 및 고객 확인 의무 미이행 등

#### ○ 법적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 2. 조치사유(지적사항)

###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개설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거래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서울)푸른저축은행은

(1) 2014.12.1. ~ 2019.5.10. 기간 중 前대표이사 구○○이 예금가입을 권유하고, 정기예금 만기안내를 받지 않는 예금주 41명이 저축은행을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저축은행 직원(비서 등)이 동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기예금 468계좌(입금액 합계: 168억 14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또한, 동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주에게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예금주가 아닌 저축은행 직원이 동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신 확인(기명날인)하여 설명의무도 함께 위반하였음

(2) 2015.3.2.~2019.4.3. 기간 중 前대표이사의 친·인척 등에게 정기예금을 개설하고 사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하거나, 예금주의 위임장에 대리인으로

적시되지 않은 자가 정기예금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없이 9명 예금주에게 15계좌(입금액 합계 : 35억 38백만원)를  
개설하였음

## 나.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고객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서울)푸른저축은행은

2006.1.18. ~ 2012.7.16. 기간 중 예금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前대표  
이사 구○○의 사촌인 구◎◎가 제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근거하여 49명 명의의 220개 예금계좌(105억 85백만원)를 개설하여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계 법규

###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 등' 관련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해임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문책경고
- 라. 주의적 경고
-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 6. 29., 2004. 7. 29., 2005. 8. 17., 2008. 2. 29.>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 6. 20.>

###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 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를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 ② (생 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1. 28.>

-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⑤ 삭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나.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0만원
다.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만원
라.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만원
마.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금융회사등	법 제8조	1,000만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별표]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제4조관련)**

1. ~ 2. (생략)
3. 금융감독원장
4. ~ 14. (생략)

## 2.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관련 법규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2014.5.28. 개정 前의 것]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7]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2013.8.13. 개정 前의 것]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권고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문책경고
- 라. 주의적 경고
-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④ ~ ⑤ (생략)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제17조(과태료)** [2013.8.13. 개정 前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생략)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2013.8.6. 개정 前의 것] 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감독·검사 등) [2015.12.30. 개정 前]의 것] ① (생략)

②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안전행정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 6. (생략)

7.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 12. (생략)

④ ~ ⑦ (생략)

### 3.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관련 법규

####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8. ~ 11. (생략)
- ② (생략)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협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② ~ ③ (생략)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营业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 27. (생략)
28.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9. ~ 61. (생략)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 비속의 배우자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

3. ~ 8. (생략)

**제2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6. (생략)

17.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17의2. ~ 21. (생략)

② (생략)

## 4. 기타 법규 : 제재 세부기준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① ~ ③ (생략)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삭 제 <2006. 8. 31.>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 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 ~ 6. (생 략)

## 7. 기관경고

-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 다. ~ 마. (생 략)

## 8. 삭 제

## 9. 기관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면직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 ③ (생 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를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를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생략)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 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2>제재양정기준**

위법·부당의 정도 유 형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 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 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I. 공통부문

####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 ② ~ ③ (생략)

###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를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나.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5. 가중 및 감경

-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다. <삭 제, 2016.2.29.>
-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 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4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①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정명령

금융회사등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전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

나.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받고도 해당营业을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나.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회사등이 제4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4. 기관경고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또는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위법·부당행위가 금융회사등의 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4)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거래자의 금전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5. 기관주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및 개선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2. 직무정지(6개월 이내)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위법·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위법·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2. 업무의 정직(6개월 이내)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견책

위법·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위법·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미등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하는 조치의 양정을 결정하며, 이 경우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는 각각 면직·업무의 정직·감봉·견책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한다.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푸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3.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통보 1명
직원 (33명)	감봉 3월 10명, 견책 5명, 주의 2명, 퇴직자위법사 실통지 16명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 등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개설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거래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서울)푸른저축은행은

(1) 2014.12.1. ~ 2019.5.10. 기간 중 예금주 41명이 저축은행을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저축은행 직원(비서 등)이 동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기예금 468계좌(입금액 합계 : 168억 14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또한, 동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주에게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예금주가 아닌 저축은행 직원이 동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신 확인(기명날인)하여 설명의무도 함께 위반하였음

(2) 2015.3.2.~2019.4.3. 기간 중 前대표이사의 친·인척 등에게 정기예금을 개설하고 사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하거나, 예금주의 위임장에 대리인으로 적시되지 않은 자가 정기예금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없이 9명 예금주에게 15계좌(입금액 합계 : 35억 38백만원)를 개설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나.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고객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을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서울)푸른저축은행은

2006.1.18. ~ 2012.7.16. 기간 중 예금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前대표이사 ○○○의 사촌인 ○○○가 제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근거하여 49명 명의의 220개 예금계좌(105억 85백만원)를  
개설하여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7371